

투데이 칼럼

위기의 한반도와 새 정부의 과제

북한이 또 다시 '레드 라인'을 넘었다. 지난 5월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섞어 쓰는' 무력시위를 감행한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ICBM 도발이다.

북한이 '적대시 정책'의 핵심으로 여기는 한·미 연합훈련 확대,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자 고강도 도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첫 번째로 쏜 미사일이 지난 3월 한 차례 실패한 신행 ICBM '화성-17형' 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은 '북한관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된다. KN-23은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에서 '풀업기동(상하기동)' 등 변칙 비행을 하는 특성이 있다.

정상 궤적으로 발사 시 한반도 전역과 주일 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두는 SRBM과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을 처음 섞어 쏜 것이다. 이는 한·미·일 3국을 향한 고강도 도발이다.

한·미 당국은 강원도 지역에서 우리 군의 현무-II와 주한 미군의 에이태컴스(ATACMS) 지대지 미사일을 1발씩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한미 양국 군이 북한 도발에 공동 대응한 것은 4년

10개월 만이다.

북한의 '섞어 쓰기'는 핵탄두 투발 수단 다양화와 성능 개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2발의 SRBM도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성능을 개량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핵탄두를 실을지는 북한의 선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북한 핵무력은 미국뿐 아니라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 처음 언급한 것으로 볼 때 모든 미사일은 핵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도 촉각이 곤두선다.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핵실험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하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

핵실험 시점에 대한 '북한 지도자도 스스로 결정을 안 했을 것'라는 추측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 나름대로 원하는 규모와 성능을 평가하는 핵실험을 위해 마지막 준비



정복규
논설위원

단계가 임박한 시점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 연합훈련과 같은 '강대강' 대처로 한반도 위기가 정점에 달할 것인 관측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러시아 관계도 악화되어 있다.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깨뜨리는 일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어떤 제재도 불가능하게 돼 있다.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을 북한이 이용해서 ICBM도 쏘 올리고 또 핵실험도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 부부장이 남측을 향해 상반된 메시지를 동시에 내놨다.

전에는 자기들 핵 개발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남한한테는 사용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에는 핵 전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남한을 압박했다.

한국은 최근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성공시켰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이 위협을 느끼면서 전술핵으로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려고 한 것이다.

'핵공격을 받았을 때만 핵무기로 보복한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를 사실상 폐기하고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한국은 원점 타격을 깨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불안해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미 전략자산이 전개될 때마다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한반도에 전략자산 확대 배치에 북한이 도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초관심사이다.

문제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그만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를 핑계로 자위적 조치를 내세울 것이다.

다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공격해오는 것에는 강한 압박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새 정부의 과제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유효정책과 경쟁 정책을 둘 다 번갈아 사용하면서 합리적이고 신속적인 대북 정책을 펴는 게 좋을 것이다.

사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5월 26일 기준금리를 연 1.75%로 인상했다. 0.25%포인트 인상한 것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8%로 13년 만에 가장 높고, 미국 통화 당국의 긴축이 빨라질 우려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당초 금통위는 코로나19 위기 때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연 0.5%까지 낮추었다. 이후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 4월 네 차례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해 연 1.50%로 올렸다.

지난 4월 25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취임한 이후 처음 주재한 금통위 역시 금리를 0.25% 인상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다.

금리 인상 배경에는 물가 우려가 커진 것과 더불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진 점도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물

가 상승률은 4.1%로 한은 연간 전망치인 3.1%를 이미 뛰어넘었다.

앞으로도 물가 상승 폭이 지속해서 커질 우려가 있다.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달러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한은이 다섯 차례 기준금리를 올려서 미국의 금리 차이를 벌려 놓았다.

이날 인상으로 미 연준 기준금리(0.75~1.0%)와 격차는 0.75%포인트까지 커졌다. 하지만 미 연준은 올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했다. 한은이 7월에 있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합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세계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 조치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기 바란

코로나 속 비정규직 처우

감염병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그리고 여성, 비사무직 등은 코로나19에 확진됐어도 업무를 지속하는 비율이 정규직, 남성, 사무직보다 월등히 높았다.

실직과 소득 감소 등의 피해도 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저임금 노동자 등에게 집중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에 확진되면 정규직 근로자 대부분은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절반 가까이 유급 휴가를 쓰지 못했다.

격리 기간 중 무급 휴가와 휴직 처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이가 2.6배, 월 150만 원 미만과 월 500만 원 이상은 18배 차이가 났다. 격리로 출근을 못하는 동안 소득 감소를 경험한 비율도 비

정규직이 51.6%, 정규직이 23.0%로 차이가 2배를 넘었다. 5인 미만과 저임금 노동자들은 절반이 소득이 줄었다.

감염병 확진 시 취약 노동자들에게 소득보전 제도가 없으면 방역 사각지대를 키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자가 진단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도 소득 감소를 우려해 PCR 검사를 받지 않고 일하는 저소득·비정규직 노동자 등 '숨은 확진자'가 많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재난 실업수당 도입 △사회연대를 위한 고용보험료 인상 제도 도입 △유급병가·상병수당 도입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 책임 강화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코로나 이후에도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이 잦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픈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 정착이 절실하다.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앞당기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여름 시작' 빈 필하모닉 서머 나이트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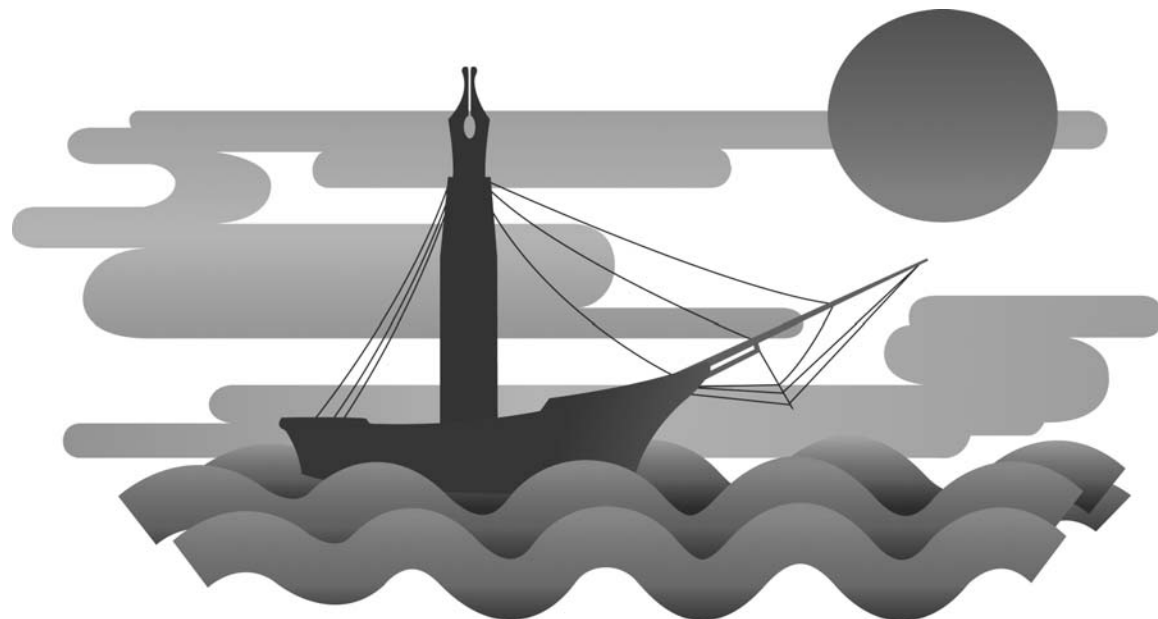


지난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의 쇤브룬 궁전 공원에서 '2022 서머 나이트 콘서트'가 열려 빈 필하모닉 관현악단이 연주하고 있다. 2004년부터 열린 빈 필하모닉 여름 음악회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쇤브룬 궁전에서 매년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클래식 축제다.

'애들이 아직 살아있네'



지난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루한시크주 리시친스크에 러시아군의 공습이 끝난 후 한 주민이 잔해 속에서 살아남은 임종을 구조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